전북경찰,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수사

후보자 6명 등 106명도

허위사실 공표 가장 많아

전북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4명과 후보자 6명 등 선거사범 106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32명(100건)에 대해 단속해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의 수사 대상 중에는 국회의원 당선자 4명과 후보자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법정 공방 끝에 중도 낙마하는 당선자도 나올 수 있어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은 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들 외에도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일부 지역구는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9명(29.5%)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 22명(16.6%), 인쇄물배부 15명(11.3%), 사전선거운동 10명(7.6%)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의 단속 결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선거사범은 소폭 줄었으나, 선거 막판 혼탁선거로 과열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렸다.

대상별로는 후보자 15명, 예비후보자 5명, 선거사무관계자 14명, 정당인 9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사대상 후보자 15명 중 5명은 수사를 종결했고, 당선자 4명을 포함한 후보자 1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기자

잊지 않을께요 지난 15일 순창고는 세월호 2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전교생 407명이 운동장에서 카드섹션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었다.

대포차 유통 30대 중고차 딜러 붙잡아

무등록 차량 122대 팔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무등록 대포차 수백대를 유통시킨 중고차 딜러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중고자동차 매매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차 딜러 김모(37)씨를 불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중고차 딜러 김씨에게 대부계약 시 담보로 설정한 차량을 판매한 사채업자 오모(36)씨와 대포차를 구입한 고객 등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등록이 어려운 저소득 고객과 지명수배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포차 122대를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업자 오씨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대신 보관하던 대포차량을 헐값에 사들여 중고차 매매상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고차 매매상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이 있다"고 유혹해 사채업자에게 받은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포기각서 등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서류를 보여주고 "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면 괜찮다"며 무등록 대포차를 팔아 넘겼다.

김씨에게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도 무등록 차량이라는 점을 알고도 대포차를 구매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기자

군산서 상습 절도 40대 '덜미'

군산경찰서는 15일 슈퍼마켓 앞에 진열한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2분께 군산시 삼학동 인근 슈퍼마켓 앞 진열대에 놓인 오이와 감자 등을 훔치는 등 총 8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야채, 생선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 훔친 물건을 되팔아 술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기자

아파트 복도서 흉기난동

10대 살인미수혐의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이군은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A(3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이군의 위협을 받은 A씨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 큰 화를 피했다.

이군은 A씨가 도망치자 화를 못이겨 복도 유리 창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은 이날 신변을 비관 술에 취해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나 가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나선 직후 눈에 띈 A씨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시민안전 다짐대회 개최

전주시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세월호 2주기인 15일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해 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안전 다짐대회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재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행사로, 참석자들은 시민대표의 안전관리헌장 낭독에 이어 오거리에서 풍남문까지 안전 문화 정착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시는 시민안전 다짐대회에 이어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한옥마을 내 시민 및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경기전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다음달 17일까지 97곳 대상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다음달 1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설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등 9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음·방진시설, 세륜·세차시설 가동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적정 처리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처분 및 과태료 처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삼성서울병원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시민단체 선정

옥시 등 11곳은 특별상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메르스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대규모 인재(人災) 유발 기업들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5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산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노동건강연대 등이 참여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생명보다 안전이 우선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을 죽게 했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1개 기업도 특별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은 삼성서울병원 선정 이유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2차 유행은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다"며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6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던 재난이었다. 국민 1만6752명이 격리됐고 186명이 감염돼 결국 38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무능한 대처를 방관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게도 특별상을 수여한다"며 "위험 생산은 기업이 하지만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사태 때 역학조사를 삼성서울병원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겼다"며 "이에 병원은 영업 방해가 될까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편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캠페인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 애경, 롯데,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도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이러한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주기자